



‘추억과 비상’ 총장축제 개막 제11회 추억의 7080총장축제가 8일 오후 동구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70년대 복고댄스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추억과 비상(飛上)’을 주제로 금남로와 총장로 일대에서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차이나 프렌들리 ‘헛구호’

광주·전남 지역축제 대부분 ‘요우커’ 몰리는 中 국경절 비커가

민선 6기 들어 ‘차이나 프렌들리(중국과 친해지기)’ 전략을 동시에 들고나온 광주·전남이 중국 국경절 연휴(10월1일~7일) 동안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유지에 실패하면서 맞춤형 축제 개최 등 시기별 유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정음성축제(10월23~26일) 등 중국인이 선호하는 축제는 물론 명랑대첩축제(10월9~12일)나 총장축제(10월8~12일) 등 대규모 축제들의 개최 기간이 국경절 연휴를 비껴가 광주·전남을 찾은 중국 관광객 수는 평소와 큰 변화가 없었다. 연휴 기간 열린 축제는 광주세계김치축제(10월4~8일), 제14회 곡성심청축제(10월2~5일)가 고작이었다.

8일 중국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 당일 국내·국제선을 통해 중국에서 국외로 나간 중국인은 125만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에도 국경절 연휴동안 20만명에 육박하는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수도권과 영남권에 서는 ‘중국 특수’를 특색화 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도 지난 1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은 중국 관광객에게 환영행사를 열기도 했지만,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광주지역 주요 백화점에서도 중국인에 맞춰 매장 배치를 조정하고, 와인 증정 행사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요우커’를 유인하지는 못했다.

실제 국경절 기간 동안 광주·전남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평소와 비슷한 2000~3000명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여행업계에선 면세점 등 선호시설 조성과 숙박·음식시설 확충, 축제 및 이벤트의 전략적 개최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주민참여자치 ‘문턱’이 너무 높다

민선자치 20년 ... 지자체 방만행정, 인사·재정권 남발 등 견제 어려워

주민갑사를 청구하려는 주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거나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때 연대서명자 수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주민참여 자치’를 가로막는 규제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문턱’이 너무 높아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민선자치 20년째를 맞아 지자체의 방만 행정, 인사 및 재정권 남발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

- 감사청구 - 개인정보 노출 사내 주민번호 의무화
- 주민발의 - 주민 총 인원 100분의 1 이상 연대서명
- 주민소환 - 총투표권자 3분의 1 넘어야 투표함 개봉

기보다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 주민 239명은 지난 6월30일 소음과 악취로 인해 마찰을 겪고 있는 인근 스티로폼 공장의 설립 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 여부, 건축물 증축 등의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전남도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 감사청구는 곧바로 반려됐다.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대표 박철진(64)씨는 “주민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극도로 꺼려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적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다고 들었는데 뒷자리까지 요구하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지난 8월7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씨 등은 주민들을 일일이 설득해 3개월만인 지난날 하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적힌 주민감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이뤄질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이달 말이나 11월 초 감사가 적정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민원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관계 기관 등에서 조사가 진행된 경우, 타 기관이 수사나 감사 중인 경우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된 이후 전남도에는 고작 5건의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됐으며, 5건 가운데 3건은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각

각’됐다.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제도 역시 실적이 초라하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전남도에는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안 제정 청구를 포함해 단 3건에 불과하며, 이 역시 19세 이상 주민 총인원 100분의 1 이상인 연대서명하도록 기준을 명시해놓은 지방자치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 단체장의 전횡과 권력 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도 역시 지난 2007년 도입됐으나 투표율(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문턱이 높아 지난해 구례의 경우를 포함해 지금까지 5차례 모두 투표함조차 열어보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으며, 지난 2003년 제정된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국책사업을 제외해 ‘알맹이’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신대학교 설립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일시: 10월19일(주일)~22일(수요일)  
장소: 광신대학교, 광주신일교회  
문의: 062)605-1000



윤장현 광주시장이 8일 광주시청 앞에서 친환경 수소차인 현대차 투싼ix를 시승하며 수소차산업 육성 의지를 밝히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수소차의 메카’ 꿈꾼다

윤장현 시장 ‘투싼ix’ 시승  
관련 산업 집중 지원 약속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주시가 민선 6기 역점사업으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연료자동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8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친환경 수소차인 현대 투싼ix를 시승하고, 수소차 관련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친환경 수소차 선도 도시 선점을 위해 수소차 분야 기술개발, 충전소 운영 및 수소차 보급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

획이다. 시는 지난 4월에는 진곡산단 클린디젤 기반시설 부지에 국비 22억5000만원을 들여 최신식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수소차 2대를 구매해 운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3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는 10대를 추가 구입하는 등 매년 수소차 구매 대수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인 수소차 기술을 보유한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투싼ix 수소차는 최고속도 160km/h의 동력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의 양산 체제도 구축한 상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사범·사대 광주교육대학교**  
제40회 총동문체육대회  
일시: 2014. 10. 18 (토) 09:00  
장소: 모교 운동장(풍향대)  
전화: 062)520-4555  
광주사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손정선



나의 취향에 맞춘 단 하나를 찾다.  
The New A-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산성지동차(주) 광주점 정사영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A200CE 1,796cc, 1,473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8km/l (도시연비: 16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07g/km • A200CE Style 1,796cc, 1,473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8km/l (도시연비: 16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07g/km • A200CE Night 1,796cc, 1,473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8km/l (도시연비: 16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07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